

국제법

문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법의 주요한 법원으로 조약과 관습 등이 있다.
- ②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의 성립에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이라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
- ③ 관습국제법은 일반국제법이므로 소수 국가들 사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 ⑤ 관습국제법과 조약 사이에는 효력의 우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해결한다.

문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 그 자체로는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
- ㄴ.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 ㄷ.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원칙이므로, 조약에 반하는 국내법은 국내적으로 당연무효이다.
- ㄹ. 관습국제법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
- ㅁ.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의 존재 또는 입법의 불비(不備)를 원용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ㄷ, ㄹ ⑤ ㄹ, ㅁ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승인은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s)의 한 유형이다.
- ② 신생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그 신생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 ③ 신생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그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 ④ 개별국가에 의한 승인은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그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⑤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 사실만으로는 승인이 철회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문 4. 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 모든 사람의 직무상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②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부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③ 한 국가의 신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④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자격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행동한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⑤ 사인(私人)이 사실상 한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한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문 5.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영역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국내 문제이다.
- ㄴ. 국내문제불간섭의무는 주권평등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 ㄷ. 무력에 의한 간섭은 금지되나 비무력적 간섭은 허용된다.
- ㄹ. 한 국가가 자신의 의사를 다른 국가에 강제하는 것은 간섭이다.
- ㅁ. 한 국가가 타국의 반란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무기공급, 정보제공 또는 병참지원을 하는 것은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6. 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손해배상(reparation for injury)의 방식으로 묶인 것은?

- ㄱ. 원상회복(restitution) ㄴ. 자위(self-defence)
- ㄷ. 대항조치(countermeasures) ㄹ. 만족(satisfaction)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7.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출생을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혈통주의는 부계혈통주의와 부모양계혈통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ㄴ. 이중국적자의 외교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관습국제법상 먼저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하는 국적국만이 그 권리를 갖는다.
- ㄷ. 국제사법재판소(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한 국가가 귀화에 의해 자국적을 취득한 개인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개인간에 '진정한 관련'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ㄹ.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주주의 국적국이 회사를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ㅁ. 개인의 국적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다.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 ④ ㄷ, ㄹ ⑤ ㄷ, ㅁ

문 15.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항권을 향유한다.
- ②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③ 통항 중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무해통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 ⑤ 연안국은 무해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의 사람에 대한 민사판할권 행사를 위하여 그 선박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문 1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교섭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문을 정본이며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묶인 것은?

- | |
|---|
| ㄱ. 서명(signature) |
| ㄴ. 가서명(initialling) |
| ㄷ. 비준(ratification) |
| ㄹ. 수락(acceptance) |
| ㅁ. 승인(approval) |
| ㅂ. 조건부서명(signature <i>ad referendum</i>) |

-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ㅂ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규정 당사국간에 발생한 분쟁이라도 ICJ의 관할권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양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ICJ규정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해 놓을 수 있다.
- ③ 분쟁당사국들이 특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ICJ의 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다.
- ④ 분쟁당사국 사이에 장애에 발생하는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조약에 미리 규정하는 경우 ICJ의 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다.
- ⑤ ICJ규정 제36조 제2항(선택조항)에 따른 관할권수락선언은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는 ICJ에서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하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자격이 부여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법적 문제에 한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권고적 의견 부여에 있어서 재판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쟁송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른다.

- ⑤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직접 요청할 수는 없으나, 요청된 권고적 의견 부여절차에 참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 |
|--|
| ㄱ.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잠정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다. |
| 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당사국으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어 소송에 참가한 국가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부여된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 |
| ㄷ.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 당사자와 재판소가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심이 청구될 수 있다. |
| ㄹ. 일방 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사건을 방어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자기의 청구에 유리하게 결정할 것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
| ㅁ. UN헌장은 회원국이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ICJ 이외의 다른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 |
|---|
| ㄱ. 패널설치 요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그 법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
| ㄴ.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총의(consensus)로 패널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은 설치된다. |
| ㄷ.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
| ㄹ.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 |
| ㅁ. 패널설치 이후에는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1.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총의(consensus)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의한다.
- ② WTO설립협정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결정은 투표과반수에 의한다.
- ③ 각료회의와 WTO 사무총장은 WTO설립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④ 각료회의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하여 회원국의 의무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각료회의에서의 WTO설립협정 부속서 1의 다자간 무역협정에 관한 해석결정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문 12.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쳤다면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제26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해고예고의무(제26조)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의 사법(私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 13.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문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의 성명과 주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④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문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 ②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③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당해 지부나 분회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 ④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없어지고 수임자만 단체교섭권한을 갖는다.
- 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②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그에 관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문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②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현행법 외에는 「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문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철도사업	ㄴ. 전기사업
ㄷ. 조폐사업	ㄹ. 시내버스운송사업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문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조정(調停)기간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조정(調停)이 성립하여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④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중재인에게 중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문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
- ④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문 22.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설치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승인
- ②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휴업수당 감액의 승인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교부
-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의한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그 소집권자의 지명
- 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에 의한 고충처리

문 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는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의결사항이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노사협의회는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문 2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노령급여
- ② 요양급여
- ③ 실업급여
- ④ 휴업급여
- ⑤ 장애급여

문 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법률은?

- ① 국민건강보험법
- ② 국민연금법
- ③ 고용보험법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은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과 관련이 없다.
 ㄴ.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의 국적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아니한다.
 ㄷ. 협약은 통화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ㄹ.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해당 국가가 모두 계약국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도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매수인이 물품을 개인 용도로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②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계약에서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로 정한 경우, 협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③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해제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시가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을 말한다.
 ③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해제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 시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물품 운송비용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시가가 있는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 차액 및 그 외에 협약상의 손해배상 일반 원칙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청약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도 청약으로 본다.
 ③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④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⑤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② 물품의 계약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④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한다.
 ⑤ 대체물인도청구는 물품의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고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 해제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여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 ②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문 8. 甲은 乙과의 첫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위하여, 2012. 5. 21. 그 날부터 30일간을 승낙기간으로 지정한 청약서를 乙에게 우편발송하였다. 이를 수령한 乙은 2012. 6. 5.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승낙기간 내에 甲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의 의사가 포함된 승낙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승낙서는 2012. 6. 25. 甲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아무런 통지도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을 전제로 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乙은 甲이 지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 ② 乙의 승낙서는 甲이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乙의 승낙서는 甲이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甲이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였으므로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 乙의 승낙서는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승낙기간 내에 甲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발송되었으므로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⑤ 乙의 승낙서를 수령하고도 甲이 乙에게 아무런 통지도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승낙서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면책규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행보조자의 면책사유 증명만으로 면책된다.
- ② 면책을 위한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의무불이행 당사자의 상대방이 진다.
- ③ 장애로 인하여 면책되는 대상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이자청구 등의 다른 구제수단도 포함된다.
- ④ 협약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 ⑤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인도기일까지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한 경우, 매수인은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계약과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 ③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당해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면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 ②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 ③ 매도인이 물품을 지체하여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④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초과분을 수령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초과분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⑤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 ㄷ.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요구된다.
- ㄹ.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서신에서 지정한 경우,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와 봉투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가 다르다면, 승낙기간은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문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약은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자율 결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 ②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한 합리적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매수인으로부터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으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④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⑤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문 14. 국제사법상 총칙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법원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ㄴ.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ㄷ.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ㄹ.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예외 없이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15. 프랑스회사인 A회사의 일본 지사장인 프랑스인 甲男은 일본인 乙女와 일본에서 혼인한 후 일본에서 살다가, 甲男이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乙女와 함께 한국으로 와서 甲男과 乙女는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 그러던 중 乙女는 캐나다회사인 B회사에서 한국에 파견한 미국인 丙男과 부정(不貞)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甲男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甲男과 乙女는 현재까지 각자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법상 이 사안에 적용할 이혼의 준거법은? (단, 이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전제함)

- ① 미국법 ② 일본법 ③ 대한민국법
- ④ 캐나다법 ⑤ 프랑스법

문 16.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 ②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 ③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하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운행허가국법에 의한다.
- ④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다.

문 17. 국제사법상 약속어음의 준거법에 관하여 A, B, C, 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약속어음행위의 방식은 (A)법에 의한다.

ㄴ.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B)법에 의한다.

ㄷ. 약속어음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C)법에 의한다.

ㄹ. 약속어음의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D)법에 의한다.

	A	B	C	D
①	발행지	발행지	지급지	발행지
②	발행지	지급지	서명지	지급지
③	지급지	지급지	발행지	발행지
④	서명지	발행지	서명지	지급지
⑤	서명지	지급지	발행지	지급지

문 18. 국제사법상 친족과 상속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후견은 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②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③ 유언의 변경은 그 당시 유언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 ④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 ⑤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문 19. 국제사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ㄴ.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ㄷ. 파양은 파양 당시 양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ㄹ.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0. 甲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A국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상 甲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 A국의 법 선택규정이 있다면, 이 사안에 적용할 준거법은?

- ① 법정지(法廷地)법 ② 甲의 상거소지법
- ③ 甲의 출생지법 ④ 甲의 거소지법
- ⑤ A국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

경 제 법

문 21. 국제사법상 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 ② 사무관리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 ③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 ④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 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문 22. 한국인 甲은 말레이시아에 영업소를 둔 영국회사에 채용되어 프랑스 지사로 발령받아 프랑스에 상거소가 있다. 그런데 甲이 이탈리아의 한 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프랑스에 상거소가 있는 이탈리아인 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乙이 대한민국 법원에 甲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국제사법상 이 사안에 적용할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단,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음)

- ① 이탈리아법 ② 영국법 ③ 프랑스법
- ④ 말레이시아법 ⑤ 대한민국법

문 23. 국제사법상 해상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선박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ㄴ.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의한다.
 ㄷ.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피구조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ㄹ.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국제사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준거법은?

- ① 법률행위지법 ② 미성년자의 상거소지법
- ③ 미성년자의 본국법 ④ 미성년자의 부모의 본국법
- ⑤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

문 25. 미국인 甲은 한국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甲은 중국인 乙에게 위 별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싱가포르에서 체결하고 준거법을 싱가포르법으로 합의하였다. 국제사법상 위 별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준거법은? (단, 별장의 대금의 이행지는 일본이며, 甲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음)

- ① 대한민국법 ② 미국법 ③ 중국법
- ④ 싱가포르법 ⑤ 일본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집단등기 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 협회를 통하지 않은 개별적 집단등기사업 수임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로 이루어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소규모의 사업자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입강제 ② 경영간섭 ③ 이익제공강요
- ④ 끼워팔기 ⑤ 판매목표강제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행위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당초에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하고 그 실행에는 불참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수요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들 간에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④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 ⑤ 합의는 관련시장이나 특정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일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은 유인의 대상이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을 위하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그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ㄱ. 자산총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임원이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 ㄴ.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의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ㄷ.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하여 결합 자체는 허용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 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련시장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입찰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이다.
- ②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는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②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③ 시장점유율이 이 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어느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고 그 계열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인 경우에 두 회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의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사유로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합병 ② 영업전부의 양수
- ③ 담보권의 실행 ④ 대물변제의 수령
- ⑤ 새로운 회사의 설립

문 9. 甲과 乙은 밀가루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고 丙은 이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하여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甲과 乙이 밀가루 공급가격을 담합하여 판매함에 따라 丙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丙은 甲과 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은 자신들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의 담합행위와 丙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丙이 입증하여야 한다.
- ⑤ 丙이 甲과 乙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를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를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동의를결의 신청인은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결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동의를결 대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민사소송에서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그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이 법은 최고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 ② 대법원은 최저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다.
-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있다.
- ④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강제성 없이 희망가격을 제시한 경우도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 ⑤ 위탁자가 자기 소유 상품의 거래가격을 수탁자에게 당연히 지정할 수 있는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문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이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ㄷ.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소비자가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ㄹ. 소비자가 기한 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④ 소비자단체는 이 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상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간접할부계약이 무효인 경우 소비자는 할부가격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 ④ 할부거래업자가 서면으로 수령한 소비자의 항변이 이 법이 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변 불수용의 의사와 그 항변이 이 법이 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서면상 항변에 대하여 항변 불수용의 의사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문 23.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결함을 알게 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한국소비자원장은 결함 상품에 대한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한국소비자원장은 행정기관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안전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문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단체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ㄴ.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ㄷ.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상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방문판매에서는 7일, 할부거래에서는 14일 이내에 각각 청약철회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의 효력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나,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그 서면이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 ③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결제업자에 대한 상계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④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업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 ⑤ 방문판매법상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음을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